IBK경제연구소
금융산업팀 연구위원 박선후(☎02-729-6522, tempest0810@ibk.co.kr)
금융산업팀 연구위원 김범준(☎02-729-7609, everydayisfriday@ibk.co.kr)

美 대선 후보

정책 비교 및 영향 분석

2016.10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IBK경제연구소

목차

Ⅰ. 美 대선 진행현황 ····· 1

Ⅱ. 지지층 분석 ····· 4

Ⅲ. 이슈 및 관건 ····· 6

Ⅳ. 정책 비교 ····· 8

Ⅴ. 영향 분석 ····· 10

[참고] 클린턴과 트럼프의 주요 공약 ····· 12

※ 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연구 자료이며,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Ⅰ 美 대선 진행현황

1 美 대통령 후보

□ **지난 7월 미국 양당의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민주당 :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 도날드 트럼프)**

○ 워싱턴 정가에서 **오랫동안 정치 경력을 쌓아온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부동산·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인으로 정치 경험은 전무**

○ **민주당은 히스패닉계인 팀 케인 상원의원**을, **공화당**은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

< 제 45대 미국 대통령 후보 약력 >

이름	힐러리 로댐 클린턴 (Hillary Rodham Clinton)	도널드 존 트럼프 (Donald John Trump)
정당	민주당	공화당
출생	1947년 10월 26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1946년 6월 14일 미국 뉴욕주 뉴욕 퀸스
종교	개신교(감리교)	개신교(장로교)
학력	웰즐리대학 정치학 학사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펜실베니아대학 와튼스쿨 경제학 학사
경력	미국 대통령 영부인(1993~2001)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2001~2009) 2008년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 미국 국무부 장관(2009~2013)	트럼프그룹 회장 트럼프엔터테인먼트리조트 설립자
캠프 구성	존 포데스타 선거대책위원장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클린턴-오바마 측근 인사 다수	제프 세션스(상원의원), 마이클 코언(트럼프그룹 변호사) 등 보수정치단체 및 트럼프그룹 출신과 일부 워싱턴 정가 인사

자료 : 언론기사 종합

2 향후 선거 일정

□ **제45대 미국 대통령은 11월 8일 대선 선거인단 선출 선거에서 사실상 결정되며, 한달 뒤(12월 9일) 대통령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침**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되며,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할 경우 당선**

* 각 주의 상원의원수(주별로 2명씩 총 100명)과 하원의원수(각 주의 인구비례로 배정된 435명)에서 워싱턴DC의 3명을 합친 수

○ **선거인단 선출 선거**는 한 표라도 더 획득한 후보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표를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방식(Winner-Takes-All)을 채택**하고 있음(예외적으로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

- 따라서,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캘리포니아주(55표)가 제일 많고 텍사스주(33표), 뉴욕주(31표) 순

○ 미국 대통령 선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취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국민인 유권자가 선출하는 것과 같은 **직접선거**의 특징을 지님

< 제 45대 미국 대통령선거 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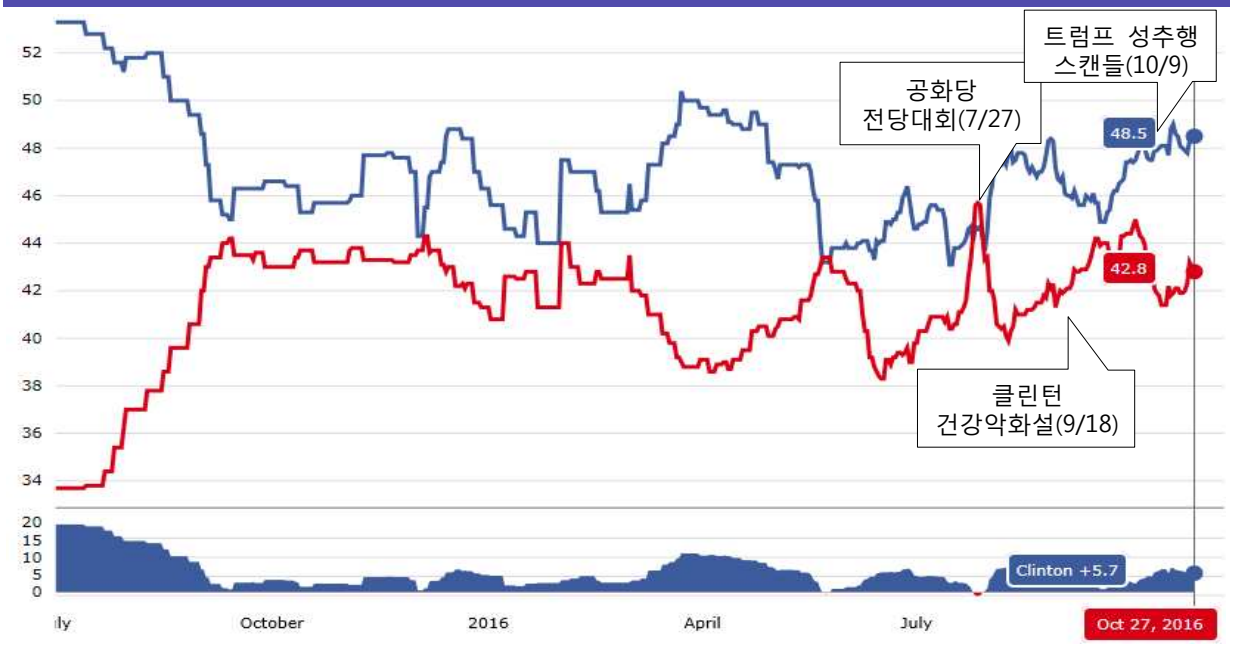
일자	주요 일정
'16년 5월 27월	공화당 예비경선 : 트럼프 매직넘버*(대의원 1,237명) 확보
'16년 6월 6일	민주당 예비경선 : 클린턴 매직넘버 (대의원 2,383명) 확보
'16년 7월 18~21일	공화당 전당대회 : 도널드 트럼프 지명
'16년 7월 25~28일	민주당 전당대회 : 힐러리 클린턴 지명
'16년 9월 26일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 : 오하이오주
'16년 10월 4일	부통령 후보 토론회 : 버지니아주
'16년 10월 9일	대통령 후보 2차 토론회 : 미주리주
'16년 10월 19일	대통령 후보 3차 토론회 : 네바다주
'16년 11월 8일	대선 선거인단 선출 선거 :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
'16년 12월 9일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
'17년 1월 20일	제45대 대통령 취임식

자료 : Bloomberg, 언론기사, * 대통령 후보 공식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각 당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

3 현재 지지율 추이

□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클린턴이 트럼프와의 격차를 유지하며 앞서가는 상황(10월20~26일 여론조사 평균, 클린턴 48.5%, 트럼프 42.8%, 5.7%p 격차)**

클린턴 vs. 트럼프 지지율 추이



자료 : www.realclearpolitics.com

[참고] 복잡하고 독특한 미국 대선제도

□ **유권자? 선거인단?**

○ (유권자) 미국에서는 선거연령(만 18세 이상)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 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함

○ 각 정당은 자기당의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서약한 선거인단 명단을 공개하고, **유권자는 선거인단 선출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

□ **선거인단의 배신?**

○ 선거인단이 소속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탈표도 발생**하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미국 역대 대선에서 선거인단 이탈 사례는 12건이나 됨

Ⅱ 지지층 분석

□ **(전통적 지지층) 민주당은 여성, 흑인·히스패닉·아시안, 젊은층, 저소득, 유태교, 진보·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반면, 공화당은 남성, 백인, 65세 이상, 고소득, 개신교, 보수 성향 유권자가 주요 지지기반**

구분	주요 그룹	2008년		2012년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성별	남성	49	48	45	**52**
	여성	**56**	43	**55**	44
인종	백인	43	**55**	39	**59**
	흑인	**95**	4	**93**	6
	히스패닉	**67**	31	**71**	27
	아시안	**62**	35	**73**	26
	기타	**66**	31	**58**	38
연령	18세~29세	**66**	32	**60**	37
	30세~44세	**52**	46	**52**	45
	45세~64세	50	49	47	51
	65세 이상	45	**53**	44	**56**
연소득	5만달러 이하	**62**	35	**60**	38
	5만~10만달러	49	49	46	**52**
	10만달러 이상	49	49	44	**54**
학력	고졸미만	**63**	35	**64**	35
	고졸	52	56	51	48
	대학재학·중퇴	51	47	49	48
	대졸	50	48	47	51
	대학원이상	**53**	45	**55**	42
종교	유태교	**77**	22	**69**	30
	천주교	**53**	45	50	48
	개신교	45	**54**	42	**57**
	무종교	**72**	20	**70**	26
	기타	43	54	**74**	23
이념성향	진보	**89**	10	**86**	11
	중도	**60**	39	**56**	41
	보수	20	**78**	17	**82**
정당성향	민주당	89	10	**92**	7
	공화당	9	90	6	**93**
	무당파	52	44	45	50
전체 지지율		53	45	51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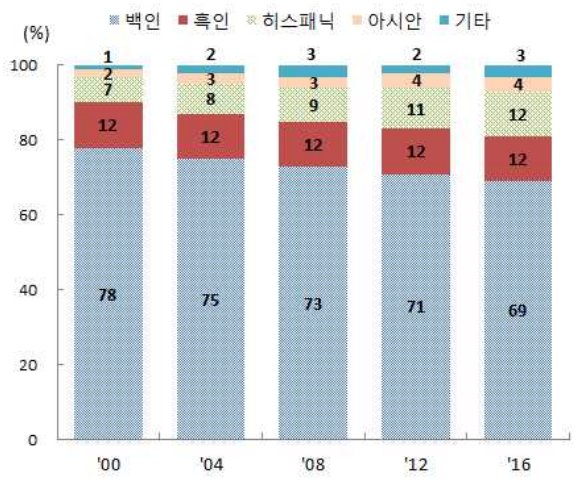
자료 : Roper Center, Pew Research Center, 단위 : %

구분	지지성향
성별	- 여성은 민주당, 남성은 공화당 지지가 많음 - 기혼남성은 공화당(60%), 미혼여성은 민주당(67%)에 높은 지지를 보이며 결혼여부에 따라 지지도 정도가 달라짐
인종	- 백인은 공화당 지지비율이 높으며, 흑인·히스패닉·아시안 등 소수민족은 민주당에 절대적 지지
연령 및 소득	- 30세미만 및 저소득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나, 연령이 증가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화당 지지
학력	-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나, 고졸미만과 대학원이상의 유권자는 민주당을 선호
종교	- 유태교·천주교·무종교·기타 소수종교 유권자는 민주당, 개신교 유권자는 공화당 지지비율이 높음
이념성향	- 진보 및 중도는 민주당, 보수층은 공화당
정치성향	- 중간지대 유권자는 2008년은 민주당, 2012년은 공화당을 선택하여 이들의 지지가 당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인구구조 변화)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민족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백인의 인구비중이 감소하여, 인구구조의 분포는 민주당에 다소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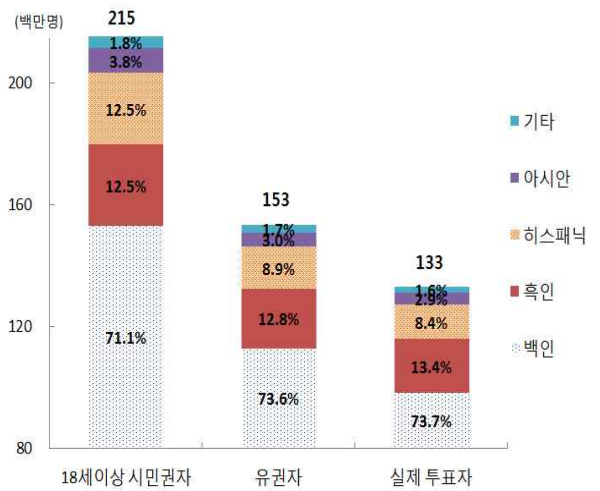
○ 18세 이상 시민권자 비중을 살펴보면 백인은 다소 감소(71%→69%)하고 히스패닉은(11%→12%) 증가하였으나, **히스패닉의 유권자 등록률이 낮아 투표가능 인구와 실제 투표율과의 상당한 괴리가 존재**

美 18세 이상 시민권자 분포



자료 : 미국통계국

인종별 유권자 비중



자료 : 미국통계국, 주 : 2012년 미국 대선 기준

Ⅲ 이슈 및 관건

□ 두 후보의 주요 지지층과 각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불일치하며, 양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높아 '누가 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할지'를 투표하는 선거로 비춰지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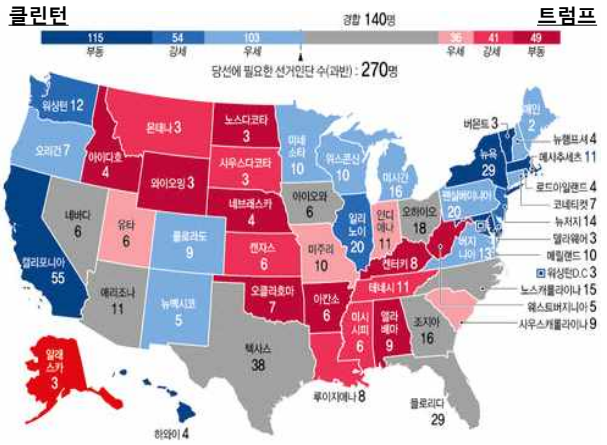
○ 트럼프는 저학력의 백인 중산·저소득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존 정당의 지지기반이 유지되지 않고 각 후보의 정책에 따라 이동하여 혼재된 양상**을 보임

○ 미국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만족도는 33%**로 '92년 이래로 진행된 미국 대선 후보 만족도 중 **최하위** 수준이며(Pew Research), **비호감도는 최고치**를 기록(트럼프 : 65%, 클린턴 : 55%, 갤럽)

○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대측 약점**(클린턴 : 이메일, 클린턴재단, 강연료, 건강악화, 트럼프 : 성추행스캔들, 납세, 자질부족 등)을 **공격하는 폭로전**이 펼쳐지고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는 등 매우 **혼탁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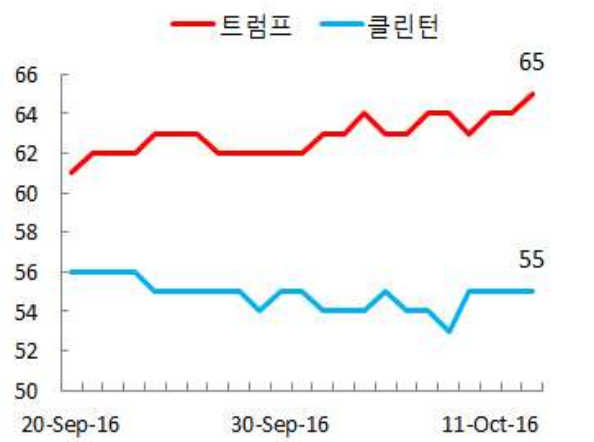
□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높으므로 지지층의 결집 및 무당파·부동층의 선택이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美 주별 여론조사



자료 : realclearpolitics, 10월 26일 기준

후보별 비호감도 추이



자료 : 갤럽, 10월 11일 기준, %

□ **다수의 주에서 클린턴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트럼프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역사적으로 중부·남부 및 중북부지역은 공화당, 서부 및 동북부 대도시지역은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으며, 8~10개주는 경합지역으로 분류

○ 선거인단이 비교적 많은 **플로리다(29표), 오하이오(18표), 노스캐롤라이나(15표) 등에서의 결과에 따라 선거 승패가 좌우**

※ 경합주 여론조사(10월 26일 기준) : 플로리다(클린턴 +1.6%), 오하이오(트럼프 +1.1%), 노스캐롤라이나(클린턴 +2.0%), 펜실베니아(클린턴 +4.4%), 조지아(트럼프 +4.0%)

□ **미국 대선의 경우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에, 낮은 투표율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해왔기 때문에, 투표율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 두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젊은 층이 선거 자체를 외면**하고 있고, 샌더스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제 3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있어 투표율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

□ **대부분의 언론 및 전문기관에서 클린턴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트럼프 현상의 실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 기존 엘리트 정치에 대한 실증과 반감, 중산층이하의 상대적 박탈감 및 분노 등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미국사회 밑바닥에 흐르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됨

○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투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한국의 4.13 총선 등 **최근 잇따른 주요 선거에서 기존 여론 및 전문가 예측이 빗나갔음**을 상기할 필요

Ⅳ 정책 비교

□ **클린턴과 트럼프의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외교·국방, 한반도정책, 세제, 이민, 의료, 금융 등 영역에서는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임**

○ 반면, 두 후보자 정책의 유사점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프라투자 확대, 강경한 對中정책, 고용창출 및 재정지출 확대** 등이 있음

□ **(통상) 두 후보자가 공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클린턴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

○ **TPP 반대 및 NAFTA 재협상 등 트럼프는 기존 무역협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고, **클린턴은 TPP는 반대하되 기존 협정은 유지**한다는 입장

○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비고
통상	무역 협정	·무역법규 위반 시 강력대응 및 환율조작국에 대한 대응 강화 ·既 발효된 협정은 유지하나 현 상태의 TPP는 반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추진 ·既 발효된 협정도 재검토 : TPP 반대, NAFTA 재협상 ·중국 및 멕시코에 관세 강화	유사
	對中 정책	·견제 강화, 환율조작 견제	·견제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유사

□ **(경제 및 산업) 양측 모두 제조업 육성, 인프라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자국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방향성에서 차이가 존재**

○ 클린턴은 **부자증세, 법인세 감면 축소,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으로 **중산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구상

○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 등 親기업 정책**을 바탕으로 석탄·화학산업 등 **전통 제조업의 재건**을 통해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고 공약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비고
경제 및 산업	인프라 투자	·인프라투자 확대, 제조업 육성 : 5년간 2,750억달러	·인프라투자 강조, 제조업 육성	유사
	고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인프라투자로 적극적 고용 창출	·최저임금 인상 ·무역개혁으로 고용 창출	유사
	재정 지출	·재정적자/GDP = 4.1%	·재정적자/GDP = 9.0%	유사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원 ·석탄·셰일가스·석유수출 반대 ·키스톤 송유관 반대	·파리기후변화협약 무효화 ·석탄산업 유지, 정유화학 규제 완화 ·키스톤 송유관 찬성	차이

□ (외교 및 안보) 동맹국과의 공조 및 대외개입, 친이민정책을 공언하는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고립주의) 및 반이민정책을 주장

○ 한반도정책에 대해서는 **힐러리는 전통적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비율 인상을 주장하며 **북한에 고압적 자세**를 보임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비고
외교 및 안보	한반도 정책	·전통적 한미동맹 중시 ·강한 압박으로 비핵화 협상 진행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율 인상 ·북한에 대한 고압적 자세	차이
	외교·국방	·대외개입정책 및 오바마 외교정책 계승 ·기존 동맹관계 유지 및 협조 강화	·미국 우선주의(고립주의) ·국방예산 줄이면서 강한 군대 유지 ·기존 동맹관계 재평가	차이
	이민 제도	·친이민·포용정책(포괄적 이민법 개정) ·불법체류자 구제,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 계승 및 확대	·반이민·배척정책 ·불법체류자 추방, 출생시민권 폐지	차이

□ (금융) 클린턴은 금융규제 및 개혁, 대형은행 분할 유도, 트럼프는 금융규제 완화, 대형은행 분할 반대 등을 제시하여 상당한 괴리가 존재

○ 금융정책에 있어 **클린턴은 위험세 도입, 그림자금융 규제, 월스트리트 개혁**을 내세운 반면, **트럼프는 은행 대출 장려, 도드-프랭크법 폐지 등 규제에 반대**하고 있어 두 후보자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비고
금융	은행	·금융규제 및 개혁 ·도드-프랭크법 찬성 ·대형은행 분할 유도 : 위험세 도입	·금융규제 완화 ·도드-프랭크법 폐지 ·대형은행 분할 반대	차이
세제	소득세	·부자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전 소득구간 세율인하	차이
	법인세	·법인세 감면제도 축소	·법인세 인하	차이

Ⅴ 영향 분석

□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통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이며, 금융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통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강화될 전망**

○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이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한미 FTA를 대상으로 협정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경우 방송·통신·의료·교육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는 등 협상 체결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

※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시 '17~'21년 수출손실 269억달러, 일자리 손실 2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경제연구원)

○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화**되겠으나, 기존 통상정책 기조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후보의 성향과 상관없이 **정권 교체 초기에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감안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특히, **철강, 금속, 화학 등 공급과잉 산업**에서 수입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피해가 우려

○ 다만, 중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규제와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TPP 반대 등으로 한국 상품의 반사익을 다소 기대할 수도 있음

□ **(외교·안보) 미국 대외정책 기조 변화로 한반도정책도 변화 불가피**

○ 트럼프의 한반도정책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극단적인 공약이 많아 당선 시 **정책 실현가능성은 낮으나, 한반도 내 불확실성이 고조**될 우려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2014년 기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 분담비율은 약 50%이기 때문에 만약 100%를 부담하더라도 국방비의 5%에 해당하는 2조원 수준에 불과

○ 국제문제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오바마 정부와 달리 클린턴은 동맹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유지 및 대외개입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대북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

○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금융) 트럼프 당선 시 재정 및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미 연준의 기존 기조대로 **완만한 금리인상이 진행**될 전망이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로 **달러화 강세는 제한적**일 것

○ **옐런 의장의 교체를 시사**한 바 있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국 기업 우선정책으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

○ 클린턴 당선 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정책 기대감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이 기대**되나, 트럼프 당선 시 재원조달이 없는 대규모 재정지출 등 무리한 공약이행 과정에서 **시장 내 불안정성을 확산**시킬 소지가 있음

○ 한편, 지난 4월에 이어 10월에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환율조작에 대한 의혹과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산업) 인프라투자 확대로 관련 산업의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

○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부동산·건설 등 관련 산업의 활황**이 기대되며, 클린턴 당선 시 **친환경에너지**(태양열, 풍력), **IT·신약개발 등 첨단산업**이, 트럼프 당선 시 **석탄·정유 및 방위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는 상·하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선거 결과를 주목할 필요

○ 미국 의회는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상원 : 55/44, 하원 : 247/188), **현직 의원의 당선 확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음 (2014년 중간선거 당시 현직 의원의 재당선율 : 상원 82%, 하원 95%)

참고 클린턴과 트럼프의 주요 공약

[경제 및 산업]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재정지출*	- 재정적자/GDP = 4.1% (세입 18.6%, 세출 22.7%)	- 재정적자/GDP = 9.0% (세입 13.6%, 세출 22.5%)
통화정책	- 지역FED 이사회에서 은행 CEO 배제 · 現 은행 CEO 3명, 일반인 6명으로 구성	- 통화정책에 정부의 통제권 강화 지지 - 옐런 의장 교체 시사 - 금리인상 반대, 달러약세 유도
고용	- (최저임금 인상) 現 $7.25 → $15 · 경선과정에서 샌더스의 주장을 수용 - $10억 인프라투자마다 13천개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 인상) 現 $7.25 → $10 · 인상 반대의 공화당 기조에서 인상으로 선회 - 무역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인프라 투자	- 인프라투자 확대로 성장동력 확보 · 5년간 2,750억달러 · 국가사회간접자본은행을 설립	-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인프라투자를 강조 · (인터뷰) '$1조 프로젝트'를 언급 · (연설) 민주당 공약 금액의 2배를 투자
에너지	-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원 및 인프라 확충 · 2020년까지 태양광 패널 5억개 설치 · 10년내 2005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 석탄·셰일가스·석유수출 반대	- 파리기후변화협약 무효화, 유엔녹색기후기금 후원 중단 - EPA(미국 환경보호청) 예산 감축 - 석탄산업 유지, 정유·화학 업종 규제 완화

* CRFB(Commitment for Responsible Federal Budget) 추정치

[복지 및 의료]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헬스케어	- 오바마케어 유지 및 확대 · 가격 인하, 경쟁유도 등 의료비 부담 완화 ·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주에 인센티브 부여	- 오바마케어 폐지 · HSA(보건저축계좌)로 대체 - 제약회사들의 시장 진입장벽 완화 - 퇴역군인의 의료급여, 노인의료보험 강화
육아	- 투자 확대 및 관련 업종 임금 인상 · 가계소득의 10%미만으로 양질의 육아가 가능하도록 보육지원 강화	- 육아비용을 소득공제로 처리 - 구체적 방안은 딸 이방카에게 일임

[금융]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은행	- 대형은행 분할 유도 · (위험세 도입) 잠재적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규모가 큰 은행에 많은 세금을 부과 - (볼커룰) 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금지	- 대형은행 분할 반대 - 은행 규제 완화 · 도드-프랭크법 폐지 : 은행 대출 장려
기타	- 그림자금융의 투명성 제고 -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기업 및 임원의 위법사항 발생 時, SEC와 법무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	- 은행들의 투명성 제고 - 헤지펀드 매니저에 과세 검토

[세제]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소득세	- 부자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주장 * (최고세율 인상) 年 $500만 이상 소득자에 現 39.6%에서 4% 인상한 43.6% * (버핏세) 年 $100만 초과 고소득자에 최저 30% 소득세 부과	- 세금 간소화 * 現 7단계의 소득과표에서 4단계로 조정 - 소득세 인하 및 면제대상 확대 * (최고세율 인하) 現 39.6%에서 25%로 * 결혼가구 기준 年 소득 $5만 이하 면제 * 다만,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공제는 축소
법인세	- 법인세 감면제도 축소로 세수 확대	- 법인세 인하 주장 * 현행 35%에서 최대 15%로 인하

[통상]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무역협정	- 旣 발효 무역협정은 유지하되 불공정 측면에 대해서는 재협상 시사 * NAFTA 등을 유지하되, 대통령 직속 무역 집행관 임명하여 국익 극대화 - TPP 반대로 선회 - 무역법규 위반時 강력대응 - 환율조작국 대응강화	- 旣 발효된 자유무역협정도 재검토 시사 - TPP 반대 및 NAFTA 재협상 - 강력한 보호무역 - 중국 무역불균형 해소 위한 관세 강화 *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 적용 · 미국기업의 해외이전 억제 *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관세 적용
對中정책	-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 부여 반대 * 환율시장 개입 반대 및 환율 조작국 대응강화 - 동맹국과 중국을 압박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 - 지식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 - 美 기업이 중국진출 時 반강제적으로 요구 받던 기술공유 요구관례 철폐 - 中 정부의 수출 보조금 금지 - 美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중국기업 대비 미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 남중국해 지역 美 군사력 증강

[외교 및 안보]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외교 국방	- 기존 동맹관계 유지 및 강화 시사 - 대외개입정책 및 오바마 외교정책 계승 · 다만, 북한과의 관계는 오바마 정부보다 강력한 입장고수 및 협상을 추진 - 이란 핵 협상, 쿠바 수교 지지 ·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	- 기존 동맹관계 재평가 시사 · 미국 우선주의 표방 -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방위비 부담을 동맹국에 분담 요구 ·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 핵무장을 포함하여 자립적 방어를 주장 - 외교 파트너로서 러시아 중시
한반도 정책	- 對이란 경제제재 방식을 적용 - 강한 압박으로 비핵화 협상 진행	- 북한에 대한 고압적 태도 - 김정은과의 만남 제안
한미 동맹	- 전통적 한미동맹 중시	-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율 인상 및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이민 정책	- (포용정책) 이민개혁법안 최우선 추진 · 1,100만명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를 구제 ·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 계승 및 확대	- (배척정책) 불법체류자 추방정책 및 멕시코 재원으로 국경에 장벽설치 · 미국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 참고 문헌 】

- www.hillaryclinton.com
- www.donaldjtrump.com
- www.realclearpolitics.com
- www. ropercenter.cornell.edu
- www. pewresearch.org
- 신유섭, 세계지역연구논총(2009),『2008년 미국 대선과 미국의 변화』
- 임성호, 국가전략(2012),『2012년 미국 대선 분석』
- 정진민, 한국정당학회보(2013),『정당 분극화 심화와 2012년 미국 대선』
- 김윤경, 국제금융센터(2016),『미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
- 대신증권(2016)『미국 대선을 읽는 key Word : H.I.N.T.』
- 제현정, KITA(2016),『미국 대선후보 확정, 한미 통상관계의 향방은?』
-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소(2016),『미국 대선후보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 조현주, NH투자증권(2016),『미리보는 2016년 미국 대선』
- 제임스김 로버트샤피로, 아산정책연구원(2016),『미국 대선 : 본선을 향한 두 정당의 발걸음』